

## 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좌 승 희\*\*

### 논문 초록

본고는 자본주의경제가 기업조직이 주도하는 기업경제임을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류가 발명한 사회적 기술인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칼 마르크스의 노동자착취수단이라는 낙인과 시장중심 경제학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오늘날 자본주의경제 번영을 이끌고 있다. 기업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에 따른 선택과 차별적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기업조직은 합의에 의존하는 시장거래와는 달리 명령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약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생산요소의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다. 본고는 시장과 정부는 물론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본질을 규명하고 자본주의는 기업경제라는 자본주의 선언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

핵심 주제어: 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 기업경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0, D0, L2, N0, O0, P0

투고 일자: 2021. 2. 15. 심사 및 수정 일자: 2021. 3. 15. 게재 확정 일자: 2021. 4. 16.

\* 이 글은 저자가 줄저(2006, 2008, 2012)와 Jwa and Yoon(2004)과 Jwa(2017) 등에서 창안한 경제발전모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저자는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두 논문심사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 박정희재단 이사장, 전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e-mail: jwa4746@naver.com

[Ronald] Coase surveys the field of economics and believes it has become a “theory-driven” subject that has moved into a paradigm in which conclusions take precedence over problems. “If you look at a page of a scientific journal like Nature,” he said, “every few weeks you have statements such as, ‘We’ll have to think it out again. These results aren’t going the way we thought they would.’ Well, in economics, the results always go the way we thought they would because we approach the problems in the same way, only asking certain questions.”.....Coase notes that one “could give a course on economics based on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but one could not give a course on any other subject, say physics, based on Newton or Galileo.” (시카고 대학 크로니클의 고 Ronald Coase 교수 인터뷰기사에서 인용; Schuler, 2004)

“오늘날의 경제연구는 마치 최첨단 자본주의 우주선 경제를 농경사회 마차경제 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어보인다”. (본문 중에서)

## I. 서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형용의 모순이다

자본주의(capitalism) 시대라는 명명과 개념의 보편화는 칼 마르크스의 작품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의 18-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등장한 대규모 자본(축적)과 대량생산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사회를 그렇게 불렀다. 마르크스의 주저작인 「자본론(Das Kapital)」(칼 마르크스, 2015)이 바로 자본의 생산(I 권)과 자본의 유통(II 권),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III)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자본주의경제체제 분석서임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시장중심의 정통 경제학도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등장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를 당연히 시장경제발전현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와 동일시해 자본주의시장경제(capitalist market economy)라 혼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산업혁명과 그 이후의 경제적 변형을 이끈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술은 17-19세기에 발명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주식회사 기업제도(joint-stock company)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이름도 이런 새로운 기업제도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대규모 자본축적과 대량제조생산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를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체제는 자본가가 기업조직을

이용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제체제이며, 결과적으로 기업을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도 기업도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역사발전의 최종단계인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주식회사 기업제도가 발명되지 않았고 소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예 그 존재를 상상조차도 못했을 일이다. 그런데 「자본론」은 주식회사 기업조직이 왜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는지를 살펴보기 보다는 그 제도를 통해 가능케 된 자본축적과 대량 생산방식에 대한 현상분석에 그치고, 그것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으니 모든 생산의 원천은 노동이며 그래서 모든 부와 자본축적의 원천은 오로지 노동의 잉여가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기업제도가 없어 기업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sup>1)</sup> 기업가정신이 있는 뛰어난 개인이 있고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어도 그리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재화의 생산은 일어나지 않으니 이렇게 보면 기업제도가 부의원천이라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오히려 주식회사제도에 대해 주식소유가 독점자본가의 소유에서 공동소유(joint-stock)로 바뀐 소유관계의 변화를 “사회적 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자본주의 소멸의 단초가 보인다고 환영했다. 그리고 주식회사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국가가 주식을 몰수해도 (공장) 경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생산 활동에 큰 충격 없이 공산·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2)</sup> 이는 마치 후일 Schumpeter (1942)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하면서 동시에 주식회사기업의 성장이 자본주의 모멸을 판다고 했던 주장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라는 자원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조직기술과 단순한 생산 공장을 혼동하는 우를 범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주식회사기업에 허용된 유한 책임하의 주식공동소유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자본축적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의 변형과 동반성장메커니즘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본고에서 기업제도(corporate institution)는 사회적 기술로서의 법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기업조직(corporate organization)은 동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제주체로서 법인격을 갖고 실제 경제행위를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2) 칼 마르크스(2015)의 제 I 권 32장과 김수행(2014)의 제5장 참조.

칼 마르크스의 딜레마는 주식회사 기업의 등장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공했으나 동시에 그 기업 때문에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어쩌면 헤겔 철학에서 빌려온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적 역사발전관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후술 하는 바 같이 기업, 특히 주식회사 기업제도의 등장 및 존재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면 주식회사기업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이 생긴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3)</sup>

한편 기업제도가 부재한 농경사회의 교환경제생활을 모델로 한 고전파경제학에서 진화한, 시장중심의 신고전파경제학은 원천적으로 기업제도가 부재한 농경사회경제학으로 정착되었다. 흥미롭게도 경제학의 뿌리라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은 영국에서 버블법(Bubble Act)에 의해 주식회사제도의 민간자율설립이 금지되었던 1720~1824 사이인 1776년에 출간되었고, 국부론의 요소요소에 특히 동인도주식회사와 같은 정부의 허가를 얻은 대기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적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국부론」은 물론 이에 기초한 현대경제학이 기업이 없는 농경사회경제학을 못 벗어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다.<sup>4)</sup>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사실상 새로운 기업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실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개념 모두가 기업조직에 친화적이지 않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현실적으로는 산업사회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칼 마르크스에 뿌리를 둔 정치경제학이나 정통경제학 모두에서 각각 기업을 천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단지 현실적으로 기업 활동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기업이 중요하다고 언설은 하지만 이론 자체 내에서 기업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인 완전경쟁균형모형이 가정하는 소위 “완전 정보(perfect information) 하에서는 이론적으로 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은 경영학이 그 경영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뿐 경제변화·발전의 주역으로서의 그 중차대한 역할은 체계적으로

3) 칼 마르크스는 자본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기업’이란 용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당시 기업조직이 이미 보편화되었는데도 그가 왜 기업이란 조직을 명시적으로 분석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어쩌면 고전파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경제나 기업을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로 분해하는 뉴턴(Newton) 식의 환원론적 분석방법(reductionism)을 추종한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4) Smith(1976; Part III, Chapter I, Book V, pp. 244-282) 혹은 아담 스미스(2007) 참조. 스미스는 영국의 동인도회사처럼 의회의 면허(charter)를 받은 주식회사를 대기업의 전형으로 비판하는 반면 소형 개인 및 가족기업은 높게 평가하였다.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많은 문제들이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의 기업의 본질에 무지하거나 기업은 그냥 상수(constant, 常數)로서 아무리 두드려도 팬찮고 항상 살아있는 디폴트상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르크스처럼 기업은 불평등의 원천으로서 청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파생되는 잘못된 기업정책들에서 연유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주식회사 기업제도가 없어지거나 혹은 기업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경제는 불가피하게 궁핍했던 농경사회로 역 주행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오늘날 전 세계가 봉착한 장기 저성장과 분배악화의 양극화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아니던, 오늘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두 개념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capitalist market economy)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지만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와 기업이 부재한 시장경제의 결합으로 형용의 모순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현실경제에서의 역할과는 달리 반기업적 정치·경제·사회적 이념이나 사고를 조장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과 이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I. 물구나무선 칼 마르크스의 역사발전관

칼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류역사발전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 원시 공산사회, 2단계; 고대 노예사회, 3단계; 중세봉건사회, 4단계; 자본주의사회, 5단계; 공산·사회주의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사회는 자체의 내부적인 모순으로 붕괴되고, 소유도 계급도 착취도 없는 공동생산과 평등분배를 하는 새로운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주의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했음은 이제 상식이 됐다. 칼 마르크스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공동집필한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선언하고 자본주의사회는 유산자(자본가) 계급과 무산자(노동자) 계급 간의 계급투쟁의 장이며, 전자가 후자를 착취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거하여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는 발달된 생산 및 교환수단과 기존의 소유관계, 즉 새로운 생산력과 기존의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몰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무산자계급의 혁명으로 유산자 계급을 청산하여 계급이 없고 불평등이 없는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 세계

노동자들이 쫓기”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1867년 출판한 「자본론」에서, 잉여노동가치설로 자본가의 노동자착취 현상을 논증하여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독려하고, 자본주의경제의 장기이윤을 저하의 법칙에 의해 자본주의사회의 종언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결국 자본가와 사기업제도를 청산하여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맹 (Association of free individuals)”인 공산·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증하고자 시도하였다.<sup>5)</sup>

모두 평등하게 부를 소유한다는 원시공산사회를 제외하면, 노예사회는 자유인이 노예를 착취하는 세상, 봉건사회는 영주가 농노나 소작농을 착취하는 세상,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세상, 공산·사회주의는 원시공산사회와 같이 소위 모두가 주인이며 착취가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가 가장 동경했지만 실제로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원시공산사회는 오늘날 공산·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환생한 셈이다. 그러나 경험은 결코 그런 세상이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공산·사회주의는 사실은 아무도 주인이 아니고 국가만이 주인인, 그래서 실상은 공산당(국가)이 모든 국민을 착취하는 세상임이 확인되었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관은 세상을 계급투쟁의 관점, 혹은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만 그리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관으로는 오늘날,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의 경제적 번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라져야 할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제자들의 끝없는 타도노력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반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산·사회주의체제는 이미 소멸되고 그들이 추구하던 경제평등의 이념만이 자본주의체제에 기생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혹은 혼합경제 체제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사회주의 경제평등이념이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생존의 본질은 무엇인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가는 노동자가 창출하는 잉여가치를 착취한다.”고 선언하는 착취이론은 결국 유산자(부자; 자본가)가 무산자(가난한 자;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시나리오로서 “흥(興)하는 이윳이 있어 내

5)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과 칼 마르크스(2015)와 김수행(2014)을 참조. 흥미롭게도 그 동안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소멸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자본주의생산체제의 장기 이윤율저하경향 때문에 저절로 일어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수행(2014)은 이 주장은 마르크스의 어느 저작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결국 의식화된 깨어있는 노동자들의 혁명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자본론」(칼 마르크스, 2015)의 「제Ⅲ권 제3편,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은 충분히 기존의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읽힌다.

가 망한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흥하는 이웃이 많아지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자들을 폭력혁명을 통해서라도 제거하여 자본주의를 청산해야 내가 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세계관은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술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을 거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한 자본주의의 변화·발전 메커니즘과는 정반대이다.

농경사회를 거쳐 기업이라는 협동조직을 통해 대량생산에 기초한 산업사회로 이행한 인류는 협동을 통한 시너지 창출의 신비한 힘을 체험한 셈이다. 낯선 개인들 간의 교환에 기초한 시장메커니즘의 취약성을 극복한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술은 서로 다른 개체들 간의 만남과 협동이 시너지를 통한 힘의 증폭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할 수 있다”는, 계급투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의 작동메커니즘을 만들어내었다. 지난 200여 년간 자본주의사회는 오늘날 복잡성과학(complexity science)이 발견하고 있는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단 힌계는 무질서가 극대화되어 소멸한다.)이 반증하는”열린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명제를 실천함으로써 번영을 구가해온 것이다. 내 옆에 나보다 더 흥하는 이웃이 있어 서로 배움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새로운 고차원의 경제로 창발할 수 있음을 매일 실천해온 셈이다. 여기서 창발이란 전체가 부분의 선형적 합보다 커지는 시너지 창출현상을 지칭한다( $1+1>2$ ).<sup>6)</sup> 물론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실제로는 끝없이 흥하는 이웃을 따라 배우고 심지어 무임승차하면서도, 흥하는 이웃은 물론 자본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흥하는 자가 이웃을 착취한다는 계급투쟁의 세계관은 오히려 평범한 이웃들이 흥하는 자를 따라 무임승차하여 결과적으로 흥하는 이웃들을 ‘착취’하게 된다는 자본주의 복잡경제(complex economy)는 물론 인류 진화의 보편적 변화이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꼴이다.<sup>7)</sup>

6) 이는 오늘날 카오스현상이나 나비효과 등 복잡계의 비선형적 오더전환현상(nonlinear order transform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잡경제(complex economy)의 발전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산타페연구소(Santa Fe Institute)가 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복잡계경제학입문에 대해서는 Beinhocker (2006) 참조.

7) 줄저(2008, 2012)와 Jwa(2017)는 이런 자본주의 복잡경제관점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전개하였으며 본고도 이를 따르고 있다.

### Ⅲ. 정통경제학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특히 경제학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두가 같아지지는 않더라도 같이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나, 혹은 그런 방안이 있기는 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던진 질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담 스미스 이래로 경제학은 경제적 자원을 유용하게 조직화하는 방식이 바로 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경제학의 주장인 셈인데, 그러나 이 주장은 완전경쟁시장균형이라는 공교롭게도 “원시공산사회”와 유사한 “천당(heaven)”이나 “열반(nirvana)”의 세상을 균형상태라 규정하고 있다.<sup>8)</sup> 모든 경제주체가 다 같고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균형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시장주의라는 말은 이념화되었다는 비판을 못 벗어나고 있다. 현실과는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강단에서 하는 학문이고 현실경제와는 다르다는 농담 같은 진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물론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도 여러 가지 논설(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등)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위의 원시공산사회를 현실화하겠다는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자들이 열반의 완전경쟁 시장균형과 원시공산사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초(1920~40) 사회주의계산논쟁(socialist economic calculation debate)에서 미세스,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아학파와 오스카 랑게 등의 좌파경제학자들 양쪽 모두가 완전경쟁모형을 매개로 논쟁하였다는 사실과 결국 사회주의계획경제마저도 완전경쟁모형에 기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완전경쟁균형모형은 소위 부자와 가난한 자, 대기업과 소기업, 불평등과 불균형은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혹은 왜 그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 같은 경제학을 공부했다하더라도 -물론 좌파경제학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각자 소위 자신의 이념에 따라 자본주의나 공산·사회주의냐를 주장하게 되는 셈이다. 대부분 동일한 경제학(교과서)을 공부한 노벨상수상 경제학자들

8) 열반의 균형상태라는 말은 고 해롤드 템세츠(Harold Demsetz) 교수가 경제학자들이 걸핏하면 불완전한 현실 세상을 규제를 통해 이상적인 완전균형상태로 만들겠다고 덤비는 행태를 일컬어서 한 말이다. 칼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불평등한 자본주의체제를 혁명으로 완전한 공산·사회주의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덤비는 행태에 대해서도 같은 비유가 적용된다.



도 정책문제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좌우파로 갈리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9)</sup>

#### IV. 시장과 조직의 경제발전역할

##### 1. 시장: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과 지원 장치

그러면 현실의 경제는 어떤 모양인가? 물론 시장(market)이 유사 이래 희소한 자원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 가장 보편적인 메커니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은 항상 성과가 우수한 경제주체를 차별적으로 선택, 지원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모두를 발전의 길로 유도하는 인센티브장치이다.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느님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원이 용의 효율을 달성하게 된다. 완전정보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정통경제학은 이런 “선택과 차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불균형속의 동태적인 변화나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현상을 일관성 있게 다루기가 어렵다.

자급자족경제를 벗어난 후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경제활동은 모두 교환경제라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조직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시장은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거래활동을 조직화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보비용, 혹은 거래비용 때문에 그 차별적 선택과 지원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소위 이를 통 털어서 시장실패라고 하는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시장이 정상이고 완전한 시장은 예외적 현상이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차별적 선택과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의 동기부여기능에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2. 조직: 시장실패의 내부화장치

그런데 유사 이래 인간은 이 시장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고 꾸준히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었고 그게 시장과 더불어 우리 인류의 삶을 향상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바로 조직(organization)이라는 장치이다. 국가라는 조직이나 기업이라는 민간 조직이 바로 시장의 취약한 차별적 선택과 지원기능을 보

9) Hedengren et al. (2010) 참조.

완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해낸 보완책이다.

시장은 거래조건에 대한 상호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소위 수평적 관계(horizontal and consensus-based system)를 기본으로 하는 자원배분장치인 반면 조직이라는 장치는 위계적, 명령관계(vertical and hierarchical command system)를 바탕으로 하는 자원배분장치인 셈이다. 그래서 시장은 협상과 합의를 필요로 하나, 조직은 합의나 협상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 모든 자원이용을 결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조직은 시장과는 달리 조직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조직의 시장대비 비용절감효과는 절약되는 거래비용에서 추가되는 조직비용을 차감한 순 비용절감효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직과 시장은 차별적 인센티브 장치로서 같은 일을 하지만 그 방식은 정반대이다. 따라서 조직은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거래비용이 높은 경제활동을 내부화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

인류는 일찍 감치 이를 간파하여 원시시대부터 조직을 활성화해왔다.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도 하이에크(Hayek) 같은 학자는 조직은 명령관계라서 공산주의 친화적인 반면 자유주의에는 반한다고 시장만이 중요하다하지만 인류역사는 그렇게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사실상 조직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인류가 발명한 사회적 기술인 셈이다. 그러나 물론 조직이 차별적 인센티브장치로서의 그 본래적 기능에서 벗어나면 인류의 삶에 해가 되기도 했다. 이의 전형적인 현대적 사례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바로 경제적 평등주의를 추구한 공산주의체제하의 국가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기업조직의 경우도 경제력과 정경유착을 이용하여 진입장벽을 쌓아 독점력을 누리는 기업이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

정통경제학의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가정을 비판하여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의 경제행위를 분석한 공으로 노벨상을 받은 Simon (1991)은 시장경제라는 명명은 잘못

10)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철학자인 Hayek (1982)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었다. 그는 시장을 자유를 본질로 하는 자생적질서(cosmos), 조직을 위계적 명령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인위적 질서(taxis)로 분류하고, 전자는 자유에 친화적인 반면 후자는 반자유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으로서 대기업들이 대세인 사회는 위계적 명령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가 퍼져 위대한 자유사회의 정신에 역행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사회주의의 명령경제와 대기업의 명령에 기초한 위계적 경영체제를 동일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류의 오랜 세월을 걸친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과정을 통해 등장하여 진화한 국가나 기업조직을 인위적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들의 본래적 기능을 망각하고 인위적으로 기능을 왜곡하는 정치가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좌승희 (2012) 참조.

된 것이며, 경제의 본질은 조직에 있고 그래서 경제를 “조직경제(organizational economy)”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때 조직은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주체들로서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시장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이 경제의 형식이라 한다면 그 실체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주장이 산업혁명이후 200년이나 지나서 나왔다는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그 후 학계의 어느 누구도 이 주장의 깊은 의미를 짚는 경제학자가 나오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물론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에 앞서 Chandler(1977; 앨프리드 찬들러, 2014)가 미국기업사연구를 통해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미국경제에서 1840년대 이후 대규모 다각화된 경영자기업(Managerial enterprise)들이 등장하여 개인·가족기업, 소유자경영기업 등 기업가기업(entrepreneurial enterprise)들을 압도하여 기업생태계의 대세를 형성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이로부터 미국경제는 이런 기업경영자들의 경영활동인 보이는 손이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은 손이라 했던 시장을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자본주의를 경영자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라 불렀다. 앨프리드 찬들러(Alfred Chandler)의 관찰도 결국은 기업이라는 조직의 활동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임을 확인한 셈이다.

본고의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라는 주장도 바로 이런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의 통찰력 있는 주장이나 앨프리드 찬들러(Alfred Chandler)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V. 정부조직의 경제발전 역할: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인류는 공산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시장교환활동이 미약했던 원시 수렵과 채집시대에도 맹수의 공격이나 타종족의 약탈행위로부터 가족과 종족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 방어조직을 활용하였다.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조직을 발명한 셈이다. 각각의 개인보다 조직화된 집단의 힘이 더 강함을 이미 깨달았던 셈이다. 여기서 진화한 군대라는 명령조직은 인간의 힘을 집단화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계질서 속에 각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내재한 시장의 대안메커니즘이다.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메커니즘 만으로 이런 방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인간은 시장을 통한 교환활동은 물론 협동의 중요성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벌써부터 깨달았던 것이다. 같은 이치로 국가라는 조직도 바로 국민들의

삶을 위해 정치·경제·사회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등장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류는 국가의 순기능에 대해 충분한 답을 못 찾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경제적 순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 인류는 20세기이후 이미 공산·사회주의체제는 물론 서구식 민주주의정치제도도 경제변영의 확실한 답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확실한 대안을 못 찾고 있다.

필자는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할 순기능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에 따라 차별적 선택과 지원을 하는 동기부여기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조직이란 장치가 원래 시장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발명되었기 때문에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국가건설의 성공사례인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기능과 동일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정책화하여 성공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의 경제발전 역할에 대한 답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도 각종의 경제제도나 정책을 통해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차별적 지원기능을 수행해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sup>11)</sup>

## Ⅶ. 주식회사 기업조직의 등장과 자본주의시대의 도래

그런데 보다 중요한 시장의 대안, 혹은 보완 장치로서의 사회적 기술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법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기업이라는 조직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주류 경제학도 기업을 그냥 생산자나 공급자로서 그래서 또 하나의 경제주체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시장과 함께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셈이다.

기업은 시장과 같은 “성과에 따른 경제적 선택과 차별을 통한 동기부여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 시장거래가 작동하기 어려운 경제활동을 내부화하여 수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시장의 영역과 나아가 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은 하나의 복잡현상(complex phenomenon)으로서 자본, 노동, 기술 등 사회의 모든 가용자원을 결합하여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창발(emergence)을 가져오는 조직이다.

11) 이에 대해서는 줄저(2006, 2008, 2012, 2020)와 Jwa and Yoon(2004)과 Jwa(2017)와 좌승희 외(2019)를 참조. 한국의 근대화경험 중에서도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을 시행한 새마을운동과 수출 지원정책과 중화학공업화정책 등의 성공경험이 정부의 경제발전기능에 대한 사례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창발이란 앞에서 언급한대로 시너지창출을 통해 부분의 선형적 합보다 큰 전체를 만들어내는 비선형적 오더 전환현상(non-linear order transformation)을 일컫는다. 경제발전이란 이런 기업조직의 창발력을 통해 경제마저 마차경제에서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경제로 창발하는 과정이다. Schumpeter (1974)의 표현을 빌리면, “마차를 아무리 많이 연결해도 기차가 되지는 않는다.”하였는데, 기차는 마차에서 창발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동안 경제학은 고전물리학의 환원론적 분석법(reductionism)을 따라 기업을 자본, 노동, 기술 등의 생산요소로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을 전일적(全一的, holistically)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의 산출물은 모든 투입물의 선형적 합보다 크다.”는 투입요소들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창출과 창발 현상을 소홀히 다뤄온 셈이다. 기업의 창발이 없었으면 인류는 영원히 농경사회의 마차경제 즉, 단순 교환경제를 못 벗어났으리라 생각한다.

원초적 조직인 가계(家計)도, 농경사회의 대장간도, 가내공업도, 카르타고의 상인들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 상인의 나라 베네치아와 또 이들이 발명한 원초적인 합자회사(콜라간차) 상인도<sup>12)</sup>, 동인도(아메리카) 발견을 실행한 콜럼버스와 스페인 이사벨라여황과의 합작사업도, 중상주의시대의 상인(merchant)과 유럽의 동인도회사들도 모두 조직으로서 개인 간의 교환에 의존하던 원시 시장경제의 영역을 확장한 조직들이다. 그러나 자급자족경제를 벗어나면서 시작된 오랜 세월의 교환경제 역사에서 기적 같은 혁신은 “유한책임 주식회사(limited-liability joint-stock company)”라는 자본주의적 기업조직의 발명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자본규모를 무한대로 확장하여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무한정으로 미지의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회사조직은 그 이전의 전(前)자본주의적 기업조직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창발한(emergent) 새로운 기업형태이다.

경제발전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17세기 중엽부터 등장했으나 1720년 버블법(Bubble Act)으로 18세기 백 년 동안 민간에 의한 자율설립이 금지되었던 주식회사 제도가 1824년 버블법의 폐지로 등록제로 바뀌면서 설립이 자유화되고, 그 동안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 없이 시행되던 주식에 대한 유한책임제도가 유한책임회사법으로 공식화되는 과정 속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

12) 카르타고와 베니스의 상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Gołota (2020)를 그리고 베니스와 합자회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로저 크롤리(2012)와 시오노 나나미(2002) 참조

가 도래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13)</sup> 산업혁명은 법인격을 갖는 기업조직의 창발을 통해 일어난 경제발전의 대 사건이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혁신이 산업혁명의 원인이라 하지만 이는 이런 혁신을 값어치 있는 재화로 대규모로 전환시키는 기업이라는 조직의 창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기술인 기업, 특히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제도화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국유화를 통해 기업조직을 없애고 생산 공장만 살린 공산주의 소련의 기술수준이 한때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개척자인 Samuelson (1989, p. 837) 이 소련의 몰락 2년전 까지도 소련경제가 번영할 것으로 예측했음은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술의 경제적 의미를 소홀히 다루는 현대경제학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4)</sup>

## VII.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

### 1. 기업은 시장(네트워크)의 확대장치

정통경제학의 완전경쟁모형은 조직으로서의 기업이 필요 없는 모형이다. 정보가 완전한 시장에서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모든 경제선택 문제를 마찰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조직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Coase (1937) 는 정보가 불완전한 현실의 시장거래에는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거래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기업이란 조직이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등장하였음을 논리적으로 밝혀 거래비

13) 영국의 기업법제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항해시대와 더불어 17세기 중엽부터 의회허가를 얻은 동인도주식회사를 포함하여 민간주식회사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주식시장의 주가버블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이를 막는다고 1720년 6월 11일, 버블법(Bubble Act)으로 주식회사를 의회허가제(chartered)로 바꿔 민간 자유설립을 금지했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주식회사가 퍼져나갔다. 결국 1825년에 버블법이 폐지되어 주식회사설립이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그 후 1844년 주식회사법(Joint-stock companies Act)이 공식적으로 유한책임제를 허용했고, 1855년 유한책임법(Limited-liability Act)과 1862년 회사법(Companies Act)으로 현대식 주식회사 제도가 정착되었다. 기업법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업법의 진화역사에 대해서는 Micklethwait and Wooldridge (2003) 를, 그리고 영국 상인의 진화역사에 대해서는 Gołota (2020) 를 참조하기 바람.

14) 사회주의경제에 지나친 기대를 가졌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초기의 국가의 대규모 집중투자가 가져온 일시적 생산증가를 중시한 반면 시장부재는 물론 기업제도부재의 장기적 효과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Ofer (1987) 도 사무엘슨(Samuelson) 과 같이 1980년대 후반까지도 소련경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었다.

용경제학의 창시자로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기업의 본질을 밝히는데 진일보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기업을 시장을 대체하는 이단적인 존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에 의하면 기업은 시장거래의 비효율성(양의 거래비용)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기업은 수직적 결합을 통해 시장을 대체한다고 논증하였다. 이는 결국 기업을 시장거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존재로 해석한 것이다. 로널드 코즈(Ronald Coase)의 논리에 따르면 예컨대 거래비용이 영(零)이 되면 시장거래가 모든 기업 활동을 대체하여 기업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며, 역으로 거래비용이 무한대가 되면 한 개의 기업이 모든 시장거래를 대체하여 시장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거래비용이 영(零)인 그래서 기업이 필요 없는 상태인 완전한 시장의 영역이 미리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거래비용이 양(陽)으로 바뀌고 점차 증가해 감에 따라 기업이 출현해서 점차 시장을 대체해 나간다는 관점이다. 태초에 거래비용이 영인 열반의 세상과 같은 완전한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면 기업은 항상 시장의 영역을 잠식하는 존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 시장은 양(陽)의 거래비용 때문에 원래 그리고 항상 불완전한 것이며,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불완전한 시장에서 초래되는 각종 경제활동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장치로 등장하는 것이다. 기업은 잠재적으로 너무 높은 생산비용이나 거래비용 때문에 원래 생산되지 않았던 재화를 새로 생산하거나, 혹은 분업이나 전문화가 미흡하여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던 재화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기존 시장 내의 거래 네트워크를 보다 더 확대하여 시장의 영역과 기능을 더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불완전한 현실시장을 기준(출발점)으로 보는 것으로 기업은 항상 새로운 재화의 생산을 통해 현실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장개척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다. 기존의 재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업의 등장을 시장을 대체했다고 보기보다 없던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확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즈(Coase)는 거래비용을 논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래비용이 영(零)인 완전경쟁시장을 출발점으로 삼는 혹은 디폴트(default) 상태로 보는 정통경제학의 틀을 못 벗어난 셈이다.

이상의 코즈(Coase)적 관점의 의도하지 못한 또 하나의 결과는 이 이론이 거래비용경제학의 또 다른 갈래인 신제도경제학의 경제성장·발전이론과 정면충돌한다는 점이다. North(1990, p. 67)는 거래비용이 높은 경제는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현대식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서비스기업들이 만연하여 경제성

장·발전이 저해된다고 하였다. 현실 경제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상식이 되었다. 이런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은 코즈(Coase)와는 반대로 현실의 불완전한 시장을 출발점인, 디폴트 경제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코즈(Coase)는 기업생태계가 더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역으로 감소한다고 보는 셈이다.

필자는 거래비용의 증가는 시장은 물론 기업성장에도 역효과를 내며 역으로 거래비용의 감소는 시장과 기업 활동을 모두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바른 관점이라 생각한다. 다만 코즈(Coase) 이론은 기업의 경제발전역할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기업생태계의 거시적 규모 하에서 기업의 다각화나 수직적 결합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sup>15)</sup>

따라서 이제는 학계도 기업의 존재이유로 거래 비용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라는 전문화된 생산조직이 내부적으로 가져오는 생산효율의 증가효과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Alchian and Demsetz(1972)은 우리의 기업관에 보다 근접한 기업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시장은 물론 기업조직은 생산요소들의 생산성과 그 보상을 보다 정확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시장도 기업도 경제적 차별화를 통한 동기부여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은 조직으로서 생산요소들의 생산 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monitoring) 할 수 있는 위계질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 접촉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보다 생산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meter) 할 수 있고, 따라서 생산성과 보상을 일치시키는 매칭(matching)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이들은 통상적인 경제학의 명제처럼 생산성이 보상을 결정하기보다 보상수준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여 기업의 동기부여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역으로 보상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경우 기업이든 시장에서든, 평등보상을 추구했던 공산·사회주의체제에서 목격되었던 것처럼, 태업(사보타주, sabotage)행위가 만연 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성과와 보상을 보다 정확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Demsetz(2008, chapter 8.)는 시장과 기업을 대체적인 관계로 보는 코즈(Coase)의 견해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기업은 생산에 있어서의 전문화가 생산성

15)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Jwa(2002, 2017)를 참조.



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한다 하였다. 여기서 기업화에 따른 전문화와 생산성증가란 바로 분업과 합리적 보상을 통한 생산요소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를 통한 시너지 창출효과의 또 다른 이름인 셈이다.

결국 종합하면 기업은 위계(hierarchy)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약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부 경영에 있어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보다 더 효율적일 경우에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경제의 영역을 개척,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필자는 복수기능 기업이론(Twin function theory of the firm)이라 명명하였다(Jwa, 2017).

한편 기업조직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시장에 비해 조직(운영)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시장 대비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에 한계로 작용하게 됨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경제 내에서 시장에 비한 기업의 상대적 영역은 기업의 복수기능을 통한 효율성증가효과(거래비용절감과 생산성증가효과의 합)에서 기업의 조직비용을 차감한 순 효율성증가효과가 클수록 더 커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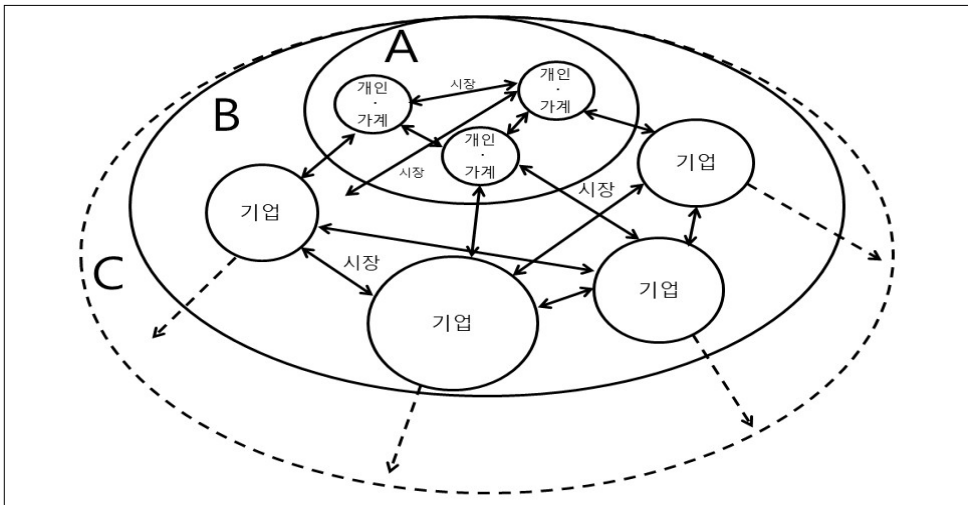
## 2. 기업경제의 구성과 시장과 기업의 역할

기업의 시장개척 및 확대기능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경제의 모습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스페이스 A는 거의 완전한 정보 하에 거래비용이 미미한 경제의 영역으로 기업조직이 거의 필요치 않은 소위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영역이다. 스페이스 B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거래비용이 너무 높은 영역으로 기업에 의해 개척되는 경제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C는 거래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보통의 기업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앞으로 아주 창의적인 기업들의 도전을 기다리는 미개척 영역이다. 그래서 스페이스 C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스페이스 A+B+C가 현실의 기업경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은 Simon(1991)의 통찰을 따라 개인이나 가게라는 경제주체들과 기업조직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로 표현된다.

이에 의하면, 코즈(Coase)는 A+B+C 를 디폴트 완전경쟁시장이라 보고, 거래비용이 증가할수록 B 혹은 C를 기업이 대체한다고 보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디폴트 완전경쟁시장은 A에 불과한데 기업이라는 조직이 B를 개척하고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기업은 C까지 개척하여 새로운 경제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 경제의 발

전과장이라 보는 것이다. 코즈(Coase)의 이론은  $A+B+C$ 가 이미 경제활동 영역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기존 거래비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스페이스 A와 스페이스 B 혹은 스페이스 B+C 간의 시장과 기업 간의 한계대체현상(substitution at the margin)을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거래 그리고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에 따라 수직적 결합이나 혹은 수평적 결합, 혹은 역으로 기업의 분사나 분할 등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자원 혹은 부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정통적인 경제학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기업경제의 구성과 시장과 기업의 역할



- 주: 1) 스페이스 A: 기업이 필요 없는 거의 완전한 시장 영역.  
 2) 스페이스 B: 기업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고거래비용 영역.  
 3) 스페이스 C: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 향후에 기업이 개척해야 될 영역.  
 4) 시장은 개인·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네트워크.

그러나 본고가 주장하듯이 경제발전이 복잡경제의 마차경제에서,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경제로의 창발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과정은 스페이스 A에서 B 그리고 C로 확장되는 경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런 경제발전현상은 새로운 자원과 부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보다 창의적인 기업들의 노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기술로 상상도 못하던 인터넷 세상을 열고,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모바일 세상을 창출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나르는 자동차와 우주선등으로 새로운 우주공간경제시대를 열겠다는 도전은 주식회사기업제도의

발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시장경제의 경계를 뛰어넘어(expansion of economic frontier) 자본주의 기업경제를 여는 일이 기업의 진정한 기능이며 역할이다.

### 3. 기업조직과 기업가는 다르다

한편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기업(firm)을 생산자(producer)로만 인식하는 주류경제학의 문제를 비판하고, 기업가(entrepreneur)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은 이제 생산자와 기업가라는 이중의 모자를 쓰게 되었다. 예컨대 Schumpeter(1942)는 기업가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자본주의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견인차라 하였다. 이제 기업가는 새로운 방식의 노하우를 통해 경제의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말하자면 경제학은 생산자에 더해서 기업가라는 새 경제주체를 추가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이라 불리는 신고전파 생산함수의 잔차항(residual)을 설명하는 근거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경제주체로서 기업가는 추가됐지만 여전히 기업이라는 제도는 어디로 갔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우선 우리 모두가 여전히 시장중심의 경제학전통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시장중심경제학은 시장이라는 필드에서 경쟁하는 개인 경제주체들의 효용이나 만족, 혹은 생산성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분석하는 틀이다. 그런데 기업조직은 시장이라는 경쟁의 필드가 현실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소위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 자원배분 메커니즘인 셈이다. 그런데 이를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인 경제주체의 하나로 치환하는 것은 또다시 기업조직이 없는 시장만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업이라는 조직이 없으면 기업가는 광야에 홀로선 개인 소비자, 생산자등과 다르지 않으며, 시장의 거래비용 혹은 정보비용에 따른 시장실패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본과 인력을 포함하여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식회사 기업조직이 없던 산업혁명이전의 세상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천재적인 개인이 아무리 놀라운 비행기설계도(ornithopter, 1490년)를 만들어도 불완

전한 시장만의 도움으로는 그림의 떡으로 끝날 뿐이었다. 그런데 실제 비행기의 실현은 4세기나 지난 후인 20세기 초에 와서야 라이트형제가 다빈치 모형을 참조하여 만든 비행기로 도전적 비행모험(1903)을 하면서 실현되었다. 그 후 실제 경제적 재화로서의 항공기이용의 보편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양차대전기간 군수용비행기의 발달을 거쳐, 1940~50년대 민간 항공기제조회사인 보잉(항공사 겸영), 맥도날더글러스 등과 항공사인 델타, 이스턴, 노스웨스트 등, 주식회사들이 초기 정부의 지원 하에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역량으로 사업화에 도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 경우 주식회사기업조직의 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사적재산권제도, 경제적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각종 경제·사회·법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자원동원과 투자위험부담능력을 겸비한 주식회사기업조직의 존재여부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물론 여기서 기업가나 경영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중요했지만 주식회사 기업제도라는 사회적 기술이 없이는 잠재적 기업가도 경영자도 개인 경제주체로서 시장의 실패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법이다.

한편 흥미롭게도 앞에서 언급한 Chandler(1977)는 이미 1840년대부터 미국을 포함 선진국에서는 기업제도가 개인·가족이나 기업소유자가 경영하는 기업가기업(entrepreneurial enterprise)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영자기업(managerial enterprise)이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관찰하였다. 기업의 창발을 기업가주도형에서 탈피한 경영이라는 보이는 손의 등장에서 찾은 것이다. 기업가만으로 기업을 설명하려는 시도나 자본주의를 기업가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초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했던 Schumpeter(1942)는 칼 마르크스의 영향으로 기업의 성장이 결국 자본주의의 묘혈을 파게 된다는 새로운 사회주의 이행론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는 기업의 성장으로 발전하지만 결국은 마르크스의 지적과 같이 경제 불평등과 독과점의 만연 등, 기업성장의 부정적 영향으로 특히 지식인사회의 반 기업정서가 고조되게 되어, 결국은 혁명이아니라도 민주적 방식에 의해 기업국유화를 통해 사회주의화된다고 예견하였다. 결국은 기업의 성장이 사회주의를 초래하게 된다는 셈이다. 경제발전현상을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경제의 창발현상이라는 암시(Schumpeter, 1974)와 더불어 이 과정을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가 주도한다는 탁월한 관찰과 주장을 한 경제학자가 동시에 이 과정이 사기업제도와 자본주의의 소멸을 초래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양 주장

간에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슈페터(Schumpeter)에게서 또다시 칼 마르크스의 딜레마를 확인 하게 되는 셈이다. 이념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반자본주의이념의 팽배가능성을 내다본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제자들의 끈질긴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변형해온 자본주의와 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한 것인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동시에 사회주의의 몰락을 일찍 예언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꽃을 피운 자유주의 사상의 거두인 하이에크(Hayek)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대기업의 보편화가 자유사회의 발전에 해가된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한편, 오스트리아 학파 중에 가장 눈에 띄게 기업가정신연구의 챔피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커즈너(Israel Kirzner)는 마치 시장실패를 포함한 그 동안 지적되어온 신고전파경제학의 많은 약점들을 기업가가 해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많은 논의에서 기업조직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sup>17)</sup> 기업은 마치 당연히 존재하는 디폴트 배경이거나 아니면 기업가를 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없는 기업가는 그냥 시장중심 경제학의 또 하나의 경제주체로 전락하게 되는데 다만 그는 “기업가”라는 주체에겐 다른 어느 경제주체보다도 막강한 능력과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중심 신고전파경제학을 비판하며 등장했으나 이제 마치 기업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만능 해결사로 등장한 것과 같아 보인다. 기업도 없이 기업가가 세상을 구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일찍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들고 나왔으나 결국은 시장 중심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기업조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경제학설사적으로 봐도 기업은 그 실제 역할에 비해 항상 푸대접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대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소규모 가족기업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주식회사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비판적 주장을 한 반면, 이미 언급한 코즈(Coase), 알치안(Alchian), 템세츠(Demsetz) 등 신제도 경제학계와 기업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Penrose(1959) 등이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위와 같이 오스트리아 학파가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주류 신고전파경제학의 기업경시경향은 공고하게 변함이 없다. 더구나 경영학의 창시자나 다름없는 Drucker(1993)마저도 역사적으로 주식회사 기업의 등장을 높게 평가하면

16) 앞의 주 10)을 참조하기 바람.

17) 커즈너(Kirzner)의 기업가정신경제학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는 Douhan et al. (2006)을 참조.

서도 산업혁명은 경제학계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발견과 기술혁신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때때로 기업에 대한 규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규제해도 되는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지식인, 정치인등, 심지어는 경제학자들도 적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기업가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려니와 더 나아가서는 기업가들의 삶의 터전인 제도로써의 기업조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자본주의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 VIII.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선언

이상의 논의를 통합하면 새로운 경제발전이론이 도출될 수 있다. 시장이 주도하던 단순 교환경제에, 기업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 발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과 기업만으로 구성되는 시장경제는 여전히 시장실패로 경제발전을 상시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시장실패교정의 마지막 주체로서 정부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물론 인간 세상인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의 성장·발전이 가능해졌다. 이런 경제발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시장, 기업, 정부 간의 유기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론화하면 다양한 경제체제의 성장·발전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sup>18)</sup>

이 이론의 구축과정에 대한 약간의 보완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발전과정의 특이성에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복잡경제의 시너지창출을 통한 창발과 발전과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선 자를 따라 배우는, 흥하는 이웃의 경제성공노하우에 대한 후발자들의 무임승차를 통한 캐치업과정이다. 무임승차를 통한 캐치업과정은 문명의 발달이나 경제의 발달이나 기업의 성장이나 개인의 성장 과정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 문화진화 현상이다.

그러면 왜 무임승차인가? 흥(興) 하는 이웃의 성공문화유전자(meme)는 그 성격이 너무나 복잡 미묘해서 그 양이나 질이 손에 잡히지 않아 거래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재화이다. 성공문화유전자는 거래비용이 과도하여

18) 이 이론의 구축과정은 적지 않은 시간의 축적과정이었다. Jwa and Yoon(2004)에서 출발하여 줄저(2006, 2008, 2012)를 거쳐 Jwa(2017)에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결국은 무임승차가 방치되게 되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이 무임승차과정은 역설적으로 성공의 인센티브를 차단함으로써 흥하는 이웃을 고갈시켜, 결국 발전과정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장실패의 구체적 형태이다. 시장만의 힘으로는 거래비용 때문에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없고, 결국 경제발전은 차단된다. 이것이 바로 농경사회 단순 교환경제가 장기간동안 생계유지에 급급한 극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원인이다. 농경사회의 말사스 함정 (Malthusian trap)이란 말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기업이라는 조직은 바로 이런 개인 간의 무임승차현상을 내부화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기술이다. 성공문화유전자의 보유자를 기업내부에 포용하여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기업전체가 유전자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재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논리적으로 볼 때 흥하는 앞선 기업이야말로 바로 후발자들의 무임승차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조직의 창발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혁명이전의 교환활동에 특화한 상인과 가내수공업 등 영세한 자본규모와 전자본주의적인 경영 및 사업구조를 못 벗어난 원초적인 가계기업조직들이 이끌었던 농경사회나 일부 상인 도시들의 모습이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주식회사 기업조직이 발명되고 정부가 이를 법제화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포함 재산권제도의 확충 등, 무임승차를 방지 혹은 보상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기업조직의 창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힘입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 또한 자본주의 경제로 도약, 창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과정은 한마디로 사회가 무임승차에 직면하는 흥하는 이웃에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는 “성과에 상응하는 차별적 보상체제”, 즉 “경제적 차별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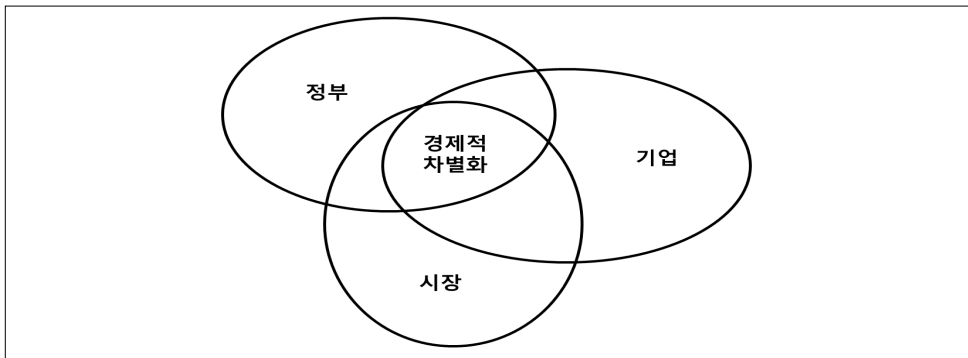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경제발전은 시장, 기업, 정부, 3자가 모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경제적 차별화라는 본래적 경제발전기능을 수행할 때라야 가능할 수 있다는 명제로 이론화될 수 있다. 부연하면, 여기서 경제적 차별화란

19) 오늘날 무임승차를 방지한다고 지적재산권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이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문화유전자는 오직 법적으로 그 재산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대부분의 성공 유전자는 무임승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 클라크(2009)에 의하면 농경사회에서도 생각이상으로 기술혁신이 일어났음이 관찰되지만 결국 결과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행기설계도(ornithopter)가 그림의 떡으로 끝난 것도 성공문화유전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거나 보상하는 조직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경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우대한다는 의미로 시장의 본래의 기능이며,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이와 반대로,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같게 취급하거나 혹은 역차별 하는 것으로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이 3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제적 차별화 대열에서 이탈하면 경제발전은 어려워진다는 의미에서 시장, 기업, 정부의 3위 일체 경제발전이론이라 별칭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차별화 기능이 시장, 기업, 정부의 기능의 공통집합으로 정착되어야만 경제발전이 가능해진다.<sup>21)</sup> (〈그림 2〉 참조.)

〈그림 2〉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요약



주: “경제적 차별화”영역은 시장·기업·정부 기능의 공통집합.

출처: Jwa (2017).

이 이론을 “경제발전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이라 명명한 이유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이론은 첫째로 시장중심 경제학의 관점과 산업정책 등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경제적 차별화기능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장 대 정부의 논쟁을 정리 하였다. 특히 정부의 경제발전역할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차별화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별화가 그동안 답을 못 찾았던 산업정책의 성공원리임을 밝혀낸 셈이다. 둘째로는 경영학의 주제로 분가된 기업의 역할이 통합됨으로써 경제학과 경영학의 협업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리고 셋째로는 시장의 선택기능에서 귀납적으로 추론한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인 반면 이에 반하는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라는 명제”를 토대로 시장, 기업, 정부 나아가 국가의

21) 이 이론의 상세 논의는 Jwa (2017, 2017a) 와 졸저 (2019, 2020) 를 참조.



정치·경제제도의 경제발전역할이 “경제적 차별화”기능의 실천에 있음을 논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이론을 정치·경제·사회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이론으로 그 지평을 넓혔다. 마지막, 넷째로는 경제적 차별화라는 국가의 정치·경제체제의 경제발전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횡단면 적으로는 물론 통시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이론은 기존의 다양한 경제발전논의를 통합하고 그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이론’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일반이론의 시사점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만약 자유 시장이 미발달하거나, 혹은 기업생태계의 성장이 부실하거나 혹은 정부가 사회·공산주의이념을 내걸고 성과를 역차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제하거나, 이중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면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질주하게 된다. 이 모든 경우 경제는 경제발전의 동기를 상실하고 하향평준화 되고 빈곤한 농경사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현대에는 국가가 시장과 기업을 거세(去勢)하고, 흉하는 이웃을 역 차별하는 경제평등이념을 추구했던 공산·사회주의 경제체제가 50-60년간의 실험 후 몰락하여, 예외 없이 모두가 농경사회로 역주행한 경험이 이를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 전환경제중 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도한 중국만이 자체적으로 산업혁명을 거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농경사회를 못 헤어나거나 중진국함정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sup>22)</sup>

새로운 경제발전이론에 따라 인류역사상의 경제체제를 분류한다면, 농경사회는 시장과 정부가 주도한 경제체제인 반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체제는 시장과 기업이 없이 정부(국가)만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주의체제는 시장, 기업, 정부가 공히 존재하는 경제체제라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발전기능과 관련해서는, 농경사회는 시장이 있었지만 기업의 기능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오히려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 한편 자본주의사회의 경우는 국가가 인센티브차별화제도와 정책을 수행하여 시장과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킨 경우에만 성공이 가능하였고 인센티브 제도를 무시한 경우는 어려움을 겪었거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공산·사회주의체제는 시장과 기업의 기능이 거세된 상태에서 국가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차별화정책이 아니라 평등주의라는 역 인센티브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개인들의 동기를 차단함으로써 몰락하였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가 경제발전

22) 좌승희·이태규(2019) 참조.

의 전제조건임을 인류역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기업조직, 그리고 정부라는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 제도의 실행주체가 공존, 유기적으로 통합된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3자가 예외 없이 경제적 차별화기능을 수행할 때는 발전하지만 역으로 어느 하나라도 이 대열에서 이탈할 때 저성장과 양극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농경사회로 역주행하게 될 것이다.<sup>23)</sup> 이런 면에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발전이론으로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에 빗대어 “자본주의 선언(Capitalist Manifesto)”이라 부를 수 있다.

## IX. 자본주의, 기업이 이끄는 동반성장 경제체제

### 1. 19~20세기 200년간의 경제체제 실험

칼 마르크스 이래 오늘날까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경제적불평등을 초래하는 체제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의 뿌리에는 바로 자본이 기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잉여가치설이 바로 이런 논리의 바탕을 제공한다.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된 오래된 논쟁을 재론할 수는 없지만 본고가 제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기업관에 따라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경제의 성장과 불평등문제에 대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의 지속적 증가라는 현상은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체제만의 현상이며, 다음으로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층의 등장도 자본주의체제 이후의 현상이다. 한편 자본주의체제 등장이전의 농경사회는 장기간동안 저소득과 극단적인 소득양극화현상을 특징으로 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해보면 자본주의 체제는 농경사회에 비해 모두 (같아 지지는 않지만) 동반성장하는 경제체제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러면 이런 결과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즉 자본주의의 어떤 장치가 이런 결과를 주도했는가? 본고의 새로운 자본주의 기업경제관이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농경사회를 시장기능도 취약했지만 특히 기업제도가 부실

23) 국가와 시장과 기업을 자본주의체제의 핵심 구성주체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국내저술로는 조홍식(2019)을 참조.

한 경제체제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시장의 발달은 물론 기업조직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새롭게 창발한 경제체제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공산·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시장은 물론 사적 기업제도마저 거세된 농경사회와 아주 유사한 체제이다.<sup>24)</sup> 흥미롭게도 이 체제는 결국 거의 모든 주요 제조기업의 기능이 멈춘 유사 농경사회로 회귀하여 몰락하였다.

결국 19세기와 20세기는 2개의 거대한 경제발전 실험을 한 셈이다. 19세기에는 기업제도가 부실한 농경사회와 기업조직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사회간의 성공실험이었다. 결과는 두 사회가 시장제도를 공유하였지만 기업제도를 내재화하고 장려한 자본주의만이 동반성장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한편 20세기에는 기업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와 반대로 기업을 거세한 공산·사회주의 체제간의 성공실험이었다. 결과는 지지하는 바와 같이 전자는 살아남았으나 후자는 몰락하였다. 20세기 실험에서 두 체제간의 흥망을 가른 결정적 이유가 시장제도의 유무에 있다는 것이 통상의 시장 중심적 주류경제학의 해석이지만 이 해석의 약점은 우선 시장중심의 농경사회가 시장제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겪은 이유와 시장제도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다 못 벗은 전환경제 중 중국이나 베트남 등 성공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시장중심해석은 다 같이 시장제도를 채택한 자본주의 경제들 중에서도 역동적인 성장경제와 정체된 경제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결국은 본고의 자본주의적 기업관이 보다 명확하게 체제간의 흥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성과를 중시하는 경제적 차별화원리를 따라 기업의 활동을 장려한 경제체제는 번영했지만 역으로 성과를 무시하거나 경제평등주의를 신봉하여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장려하지 않은 경제는 예외 없이 저성장과 분배악화에 직면했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기업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체제가 등장하면서, 농경시대 내내 농토에 밭이 묶여 말사스 함정이라는 가난을 못 벗어나던 대부분의 인류는 이제 농토를 탈출하여 기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소위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길을 택하였다. 자본주의체제하의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산층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역할을 해 온 셈이다. 기업생태계가 왕성해지면 성장이 빨라지고 중산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동반성장이 가능

24) 통상 공산·사회주의체제는 사적재산권과 경제적 선택과 결사의 자유가 부재한 체제로 규정하는데, 기업이란 조직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모든 제도를 바탕으로 작동하며 이들 제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해 진다. 오늘날 소위 선진경제라는 나라들의 GDP나 전체인구대비 농업부문의 비중은 대체로 5%대 아래로 낮아졌다. 공업화가 고도화될수록 이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제발전의 순리에 역행하여 기업조직을 청산하고 평등주의를 신봉하는 공산당이 운영하는 공장만 돌린 공산·사회주의체제는 칼 마르크스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이미 그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이제 자본주의적 기업관으로 20세기 후반의 세계경제성장역사를 개관해봄으로써 기업과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확인해볼 차례이다. 이 기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성공했던 자본주의 국가는 정부가 기업이라는 “흥하는 이웃”의 성장을 장려하는 경제적 차별화 정책원리를 실천한 반면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고 “흥하는 이웃”을 거세하기 위해 기업제도를 청산한 공산·사회주의국가는 모두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한 사회민주주의 등 유사 사회주의체제국가들도 저성장과 양극화합정을 면치 못하였다. 일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중 그나마 다소 양호한 분배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몇 나라들은 흥미롭게도 친 기업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sup>25)</sup>, 세계주요국들의 지난 50~60여 년간의 소득 성장과 분배 추세를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분배는 시장소득은 물론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모두 악화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가처분소득의 분배를 개선한다고 정부의 고강도 개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추세적 개선에 실패하여 반복되는 재정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득성장추세가 지속 악화되고 있어 재분배정책의 장기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재분배정책의 강도를 보기위해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비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 비율이 전혀 하락하지 않고 대부분 완만하지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분배정책이 실제 시장소득의 분배를 개선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가처분소득분배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재분배정책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차 대전이후 본격화된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 수정노력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같은 연구의 기업성장의 소득성장과 소득분배개선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성장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25) 이하 주요국의 소득성장과 분배추세에 대한 논의와 다음의 기업과 경제성장과 분배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Jwa and Lee (2020) 참조.

있는데, 이는 본고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체제가 경제의 동반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명제를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기업성장의 경제성장효과를 감안하고 나면 교육수준 향상의 경제성장과 분배개선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그 동안의 자본주의 수정 노력이, 분배문제에만 치중하여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등한시함으로써 반 기업적으로 흘러, 신고전파경제학의 성장처방인 교육, 과학기술 부문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물론 분배마저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물이해가 부른 결과로서 기업의 역할이 없이 자본주의경제의 동반성장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sup>26)</sup>

이제 지난 2세기에 걸친 경제발전실험의 결과는 기업생태계의 역동적 성장여부가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과 나아가 이는 정부가 스스로 도와 홍하는 이웃을 장려하는 제도와 정책을 수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을 키워내는 기업생태계의 활성화와 성장 없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기업은 자본주의경제의 동반성장의 견인차와 같다.

## 2. 20세기 후반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실험

20세기 기업주도 자본주의 경제 대 기업(과 시장)이 거세된 공산·사회주의 경제간의 체제경쟁 실험의 백미는 우연하게도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동일한 민족으로 같은 역사를 5천년동안이나 공유한 한국이 2차 대전이후 남북으로 갈려 남에는 자본주의, 북에는 공산주의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70여 년 간 양 체제의 경쟁결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남한)은 1940~50년대 세계최빈국에서 출발하여, 1960~80년대 박정희정부의 기업주도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30여 년간 연평균 9%대의 세계최고의 동반성장

26) 이 상의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전계 논문, Jwa and Lee(2020) 참조하기 바람,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 69개국의 2006~2013년간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이용한 계량분석결과에 의하면 1%의 기업자산 증가는 0.42%의 GDP 증가와 0.0045의 시장지니계수의 감소를 가져오며, 1%의 GDP 증가는 0.025의 시장지니계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결과는 기업과 소득성장 없이 분배개선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업자산효과를 동시에 감안했을 때 교육수준향상의 경제성장이나 분배개선효과는 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재분배정책강도를 측정하는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비율은 소득성장과 분배에 모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분배정책은 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을 실현하고, 지난 30여 년간 수정자본주의 노선으로 일부 성장 동력의 훼손이 없지 않았으나, 오늘날 선진 수준의 고도 산업구조와 일인당 소득 3만불 수준을 달성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창출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박정희시대의 경제정책패러다임은 한마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과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차별화” 패러다임이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던 전근대적인 농촌사회를 근대사회로 이끌어 내었다. 자본주의적 기업경제관으로 단숨에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를 택한 북한은 아직도 세계 최빈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스로 돕는 이웃을 장려하여 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한 남한과 이들을 제거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다 던 북한간의 의도하지 않은 체제경쟁은 인류경제발전사에 있어 너무나 값진 경제발전실험사례가 되었다.

지난 70년간의 한반도에서의 실험은 기후, 인종, 문화, 역사의 차이를 통제한 경제발전 체제실험으로 단지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차이가 국가건설, 경제발전에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남한은 최 빈곤 농경사회가 자본주의 선진사회로 전환되었고, 북한은 남한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여전히 농경사회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반도에서의 실험은 인류가 200년에 걸쳐 겪은 농경사회, 자본주의체제, 공산·사회주의 체제 간의 길고 지루했던 체제경쟁실험을 단 70년 만에 압축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 셈이다. 한반도에서의 경제발전 실험의 진수는 역시 자본주의 기업경제는 동반성장의 경제체제이며, 기업제도가 부재한 공산·사회주의체제는 결국 농경사회로 역주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 보여줬다는 점이다.<sup>27)</sup>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1990년대 정치민주화 이후 서서히, 최근에는 급격하게 ‘수정자본주의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반기업 정서가 누적되면서 기업규제정

27) 앞에서 언급한 소련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던 사무엘슨(Samuelson)이나 오퍼(Ofer)와 마찬가지로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기업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낙관론을 피력한 경제학자도 있었다. 자본축적론으로 유명했던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고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은 1964년 북한방문 후 북한경제의 발전을 ‘한국의 기적(Korean Miracle)’으로 평가하고 조만간 사회주의 북한이 남한을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Wikipedia, “Joan Robinson”). 북한의 초기 정부주도의 집중투자로 인한 자본축적과 일시적 성장효과를 평가한 반면 기업과 기업투자가 없는 경제의 문제를 읽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책이 강화되어 왔으며, 이제 ‘자본주의 기업경제’의 속성이 사라지고 있다. 소득수준은 3만불을 넘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추세 성장률은 급격히 낮아져 이제 겨우 1~2%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한반도의 남쪽에서 마저 기업이 거세된 ‘유사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실험해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sup>28)</sup>

### 3. 미국의 250년 자본주의 발전사: ‘자본주의 기업경제’ 발전의 전형(典型)

마지막으로, 미국경제의 발전사를 통해 ‘자본주의 기업경제관’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약 250년 전인 1776년에 독립하여 거의 무(無)에서 출발하여 20세기 이후 거의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최강의 경제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사는 전형적인 기업경제 발전사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을 역임한 앨런 그린스판과 에이드리언 울드리지(2020)는 『미국자본주의의 역사(Capitalism in America)』에서 이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여 본고의 자본주의 기업경제관을 검증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들은 미국경제가 건국 이래 100년 가까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여 초기 산업혁명 단계에 접어들어 북부와 노예노동을 기반으로 한 농경사회를 고수한 남부로 이원화된 ‘상업의 나라’였으나, 1861~65년 4년간의 남북전쟁 이후 통합되면서, 1865~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까지 빠른 속도로 본격적인 산업혁명과정을 밟았다고 본다. 그들은 남북전쟁 이후 1865~1914년까지 50년간의 본격적인 산업혁명과정을 ‘자본주의의 승리’ 기간이라고 명명하고, 이 시대는 거대 ‘주식회사 기업’과 이를 이끈 ‘거인 기업가들의 시대’였다고 평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진보적 대통령임을 자처한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주도 하에 거대 기업과 소위 “강도귀족”(Robber Baron: 산업혁명 시기를 통해 등장한 거대 기업의 성공한 기업가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 불린 거인 기업가들의 성장을 가져온 그동안의 자유방임적 기업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개혁이 있었으나, 1920년대에는 워런 하딩과 캘빈 쿨리지 대통령 하에서 재차 ‘미국의 발전 동력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그리고 미국은

28) Jwa (2017a)는 자본주의 기업경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지난 60여 년간의 경제제도 변화와 장기 성장추세변화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Jwa (2020)는 같은 관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과 그에 따른 기업성장이 한강의 기적의 동인이며, 동시에 지난 30여 년간의 기업규제정책이 그 동안의 추세성장 하락의 원인임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기업의 나라’라는 전통적 이념으로 회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의 소위 “진보적 개혁”은 다소 주춤했으나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의 와중에 등장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192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최강 경제로 올라선 미국은 1930년대 사상 최악의 대공황과 제2차 대전에서의 전쟁 수요와 전후 복구에 따른 1945~1970년까지의 대호황과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레이건과 클린턴대통령시대로 이어진 1980~90년대의 놀라운 경제회복<sup>29)</sup> 등과 같이 명과 암이 교차하는 20세기를 보내고, 2천 년대 들어 부닥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정체국면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자들은 이런 흥망의 20세기 미국경제의 역사 또한 결국은 미국의 태생적인 ‘상업의 나라, 기업의 나라, 기업가의 나라, 그리고 자력갱생의 나라’라는 기업 경제적 이념이 지배하는 시대는 호황을 누린 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반기업적 규제정책과 친(親)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강화 등 소위 “진보적 정책”이 지배하는 시대는 불황을 면치 못했다 해석하고 있다. 특히 60년대 초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오늘날 진보적 정책의제가 자력갱생의 나라 미국경제에 항구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sup>30)</sup>

이렇게 보면 250년 미국 경제사는 ‘자본주의 기업경제관’의 거의 완벽한 실험과정이었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업이 국가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이념이 지배한 시대는 성공하였지만 역으로 ‘국가가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념이 지배한 시대는 실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경제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미국경제가 ‘자본주의 기업경제’의 전형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영국이 발명했는데 ‘영국은 어쩌다 미국에 추월당했을까?’하는 점이다. 물론 주식회사제도는 식민지 미국이 영국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복제하여 무임승차한 셈이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영국도 미국 못지않은 강한 기업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의 힌트는 Micklethwait and

29)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대 미국경제의 부활을 이끌었다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의 내각실(Cabinet Room)에 트루먼 대통령의 초상화를 내리고 콜리지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는 1920년대와 1980~90년대의 정책상의 유사성을 암시하고 있다.

30) 저자들은 존슨대통령 시대에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의 보건복지제도를 새로 도입한 이후 복지지출의 과다한 증가로 2014년 현재 20% 수준까지 악화된 연방정부예산의 재량적 지출비중이 2022년에는 10%아래로 떨어진다는 예상을 크게 우려한다.



Wooldridge (2003) 와 Jwa (2017, p. 68) 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은 주식회사를 발명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귀족과 평민간의 계급구조가 강한 나라여서 교육받을 기회가 많은 부유한 명문 귀족출신들은 기업을 창업하고 일으켜 부자가 되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고 정치인, 학자, 법조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주식회사 대기업을 일으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인생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는 이미 지적했듯이 주식회사 대기업보다 개인·가족기업이 더 우월하다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의 주장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두 새로 시작하여 계급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민자 사회인 미국은 역으로 기업을 일으켜 부자가 되는 것이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은 짧은 기간에 기업경제가 창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랜 세월의 농경사회를 거친 영국은 농경사회의 보편적 계급의식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이념이 지배했던 반면, 농경사회의 역사가 일천했던 미국은 이런 계급이념이 약했기 때문에 상인과 기술자가 대량으로 창출되는 사회로 보다 쉽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31)</sup>

## X. 결어: 동반성장의 자본주의 기업경제의 과제

이제 왜 자본주의 경제를 기업경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은 자본주의시대를 시장경제라 부르는 것이 보편화 되었지만, 시장경제는 농경사회와 자본주의사회가 공유하는 특징이다. 반면,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자본주의 경제만의 특징이다.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제도가 없고 산업혁명을 못 거치는 경제는 농경사회를 탈피하지 못하며, 주식회사제도를 제도화한 자본주의만이 산업사회, 고도 지식기반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기업제도를 거세(去勢)한 공산·사회주의체제는 결국 망하여 제조업이 몰락한 농경사회로 역주행하였다.

따라서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농경사회를 시장경제 그리고 자본주의체제(하의 산업사회나 고도지식·정보기반사회)를 기업경제라 하고, 공산·사회주의체제는 국가통제경제라 하는 것이 각 체제의 핵심 제도적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칼 마르크스의 노예사회나 봉건사회 등은 노동력의 공급자

31) 흥미롭게도 한국의 박정희시대의 한강의 기적도 전래의 사농공상의 계급이념 속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상인과 기술자들을 우대함으로써 이들이 주도한 산업혁명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좌승희·이태규(2019) 참조.

가 농노나 소작농이나 임금노동자나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경제생활을 조직화하는 주 메커니즘이었다는 점에서 농경사회라는 시장경제의 큰 틀 속의 하위체제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 동안 관행처럼 사용되어온 시대의 구분이나 명칭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중요한 전인차가 “주식회사 기업제도”에 기반 한 자본주의적 기업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역행해온 그 동안의 칼 마르크스적 반기업적 세계관에서 탈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자본주의적 기업의 성장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력 남용가능성은 그것대로 관리할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도 그 존재이유인 “경제적 성과에 따른 선택과 차별의 동기부여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 본능을 장려하는 것이 자본주의경제 동반성장메커니즘을 지키는 길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제력남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하는 경제력과 그 경제력을 남용하고자하는 인센티브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동안 경제력의 집중을 막는다고 기업의 성장을 억제했던 전통적인 정책은 결국 경제전체의 성장마저도 억제한 셈이다. 올바른 정책은 성장은 허용하되 진입을 자유화하고 동류의 기업을 더 많이 육성 장려하여 경쟁압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그 힘을 남용할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경제력 남용의 인센티브는 잠재적 혹은 실제 시장경쟁압력의 역함수(逆函數)이기 때문이다.<sup>32)</sup>

마지막으로 경제학의 미래에 대해 몇 자 첨언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경제학은 기업이 없는 농경사회경제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경제연구는 마치 최첨단 자본주의 우주선 경제를 농경사회 마차경제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어보인다. 환원주의에 따라 기업조직은 자본, 노동, 기술이라는 생산요소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전지전능한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은 손이 생산함수라는 블랙박스(black box)를 이용하여 신비한 방법으로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신고전파 경제학모형은 오늘날 기업조직이라는 보이는 손<sup>33)</sup>이 이끄는 고도 산업 및 지식기반사회를 설명하는데 한

32) 이러한 정책명제에 대해서는 Alchian and Allen (1977) 과 Jwa (2017)를 참조. 이 명제를 한국현실에 맞게 해석하면, “삼성의 경제력이 문제라 생각한다면 삼성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 급의 대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하도록 오히려 대기업들의 성장을 장려해야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33) 전계 Chandler (1977) 혹은 앨프리드 챌들러 (2014) 참조.

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향후 어떻게 기업조직을 명시적으로 경제성장·발전 모형에 도입할 것이냐가 아마도 가장 큰 경제학의 과제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미흡하지만 본고가 제시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이 시장과 정부는 물론 기업제도와 조직의 경제발전 역할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본질을 규명하고 자본주의는 기업경제라는 자본주의 선언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 참 고 문 헌

1. 그레고리 클라크, (이은주 옮김), 『앨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A Farewell to Alms)』, 대한민국, 서울: 한스미디어, 2009.
2. 김수행, 『자본론 공부: 김수행 교수가 들려주는 자본이야기』, 대한민국, 서울: 돌베개, 2014.
3. 로저 크롤, (우태영 옮김), 『부의 도시 베네치아』, 대한민국, 서울: 다른 세상, 2012.
4. 시오노 나나미, (정도영 옮김), 『바다의 도시이야기(상, 하)』, 르네상스 저작집 6, 대한민국, 서울: 한길사, 2002.
5. 앨런 그린스팬과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김태훈 역), 『미국자본주의의 역사(Capitalism in America)』, 대한민국, 서울: 세종서적(주), 2020.
6. 앨프리드 첼너리, (김두열·신해경·임효정 역),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 사상선집, 대한민국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사, 2014.
7. 아담 스미스, (김수행 역), 『국부론(상, 하)』, 경제학 고전선, 아담스미스, 대한민국, 서울: 비봉출판사, 2007.
8. 조홍식, 『자본주의 문명의 정치경제』, 서강 학술총서 126, 대한민국,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9. 좌승희, 『신국부론: 차별화와 발전의 경제학』, 대한민국, 서울: 굿인포메이션, 2006.
10. ———, 『발전경제학의 새 패러다임: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대한민국 서울: 울곡, 2008.
11. ———,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대한민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2. ———,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 대한민국, 서울: 청미디어, 2020.
13. 좌승희·이태규,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 대한민국, 서울: 기파랑, 2019.
14.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I, II, III)』, 대한민국, 서울: 비봉출판사, 2015.
15. Alchian, Armen A. and William R. Allen, *Exchange and Production: Competition, Coordination, and Control*, 2n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77.
16. Alchian, Armen A. and Harold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Armen A. Alchian, *Economic Forces at Work*, Indianapolis, IN: Liberty Press, pp.73-110; originally published (1972) i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No. 5, pp.777-795, 1977(1972).
17. Beinhocker, Eric, *The Origin of Wealth: Evolution, Complexity, and the Radical Remaking of Economics*,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6.

18. Chandler, Alfred D., J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 USA and London, UK: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19. Coase, Ronald,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1932, pp. 386-405.
20. Demsetz, Harold, *From Economic Man to Economic System: Essays on Human Behavior and the Institutions of Capitalism*,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1. Douhan, Robin, Gunnar Eliasson and Magnus Henrekson, *Israel M. Kirzner: An Outstanding Austrian Contributor to the Economics of Entrepreneurship*, IFN Working Paper No. 678,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Stockholm, Sweden, 2006.
22. Drucker, Peter,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Business,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3.
23. Gołota, Łukasz, *Economic World Powers-historical Types: Carthage-Venice-England*, Working paper,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arsaw University, 2020.
24. Hayek, Friedrich Von, *Law, Legislation and liber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1982.
25. Hedengren, David, Daniel B. Klein and Carrie Milton, "Economist Petitions: Ideology Revealed," *Economic Journal Watch*, Vol. 7, No. 3, September 2010, pp. 288-319.
26. Jwa, Sung-Hee, "Why Firms and Markets?"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15, No. 2, 2002, pp. 277-294.
27. \_\_\_\_\_,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 Cheltenham, UK ·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28. \_\_\_\_\_, *The Rise and Fall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or the Developing and Developed Economies*, Cham, Switzerland: Palgrave-Macmillan, 2017a.
29. \_\_\_\_\_, "Theory and Empirics of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 Application to Korean Economy,"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33, No. 2, Summer, 2020.
30. Jwa, Sung-Hee, and Y. Yo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A Study in Economic Discrimination and Political Philosophy,"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17, No. 3, 2004, pp. 275-307.
31. Jwa, Sung-Hee, and Taekyu Lee,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working paper (under review), 2020.
32. Micklethwait, John and Adrian Wooldridge, *The Company: A Short History of a Revolutionary Idea*,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3.
33. North, Douglass,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4. Ofer, Gur, "Soviet Economic Growth: 1928-1985,"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5, No. 4(Dec.), 1987, pp. 1767-1833.
35. Penrose, Edith,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New York: John Wiley & Sons, 1959.
36. Samuelson, Paul, *Economics*, 13th ed. New York: McGraw Hill, 1989.
37. Schuler, Peter, "Coase discusses famous theorem, future of applying economics in today's

-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Chronicle*, November 18, Vol. 24, No. 5, 2004.
38. Schumpeter, Joseph,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42.
  39. Schumpeter, Joseph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nslated by Redvers Opi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1934].
  40. Simon, Herbert, Organization and Market,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2, 1991, pp.25-44.
  41.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 (edited by Edwin Cann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42. Wikipedia, "Joan Robinson".

## A Capitalist Manifesto: The Capitalist Economy is a Corporate Economy\*

Sung-Hee Jw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the capitalist economy is a corporate economy dominated by corpor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and historical experience. The joint-stock company system, a social technology invented by mankind, despite Karl Marx's stigma as a means of exploitation and ignorance of market-oriented economics, has led to the prosperity of the capitalist economy today. Like the market, the corporate organization is a device that induces shared growth by motivating production factors through selection and differential compensation based on economic performance. However, unlike market transactions that rely on consensus, the corporate organization is a device that internally allocates resources through hierarchical control, so it can not only correct market failures by saving transaction costs, but also monitor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duction factors more efficiently. By presenting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explicitly introduced the role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rporation as well as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this paper clarified the nature of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thereby, could theoretically substantiate the capitalist manifesto that capitalist economy is a corporate economy.

**Key Words:** capitalist manifesto, capitalist corporate economy,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JEL Classification:** B0, D0, L2, N0, O0, P0

---

*Received: Feb. 15, 2021. Revised: March 15, 2021. Accepted: April 16, 2021.*

\* This paper is based on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established by the author's earlier works such as Jwa (2006, 2008, and 2012, in Korean), Jwa and Yoon (2004), and Jwa (2017). The author appreciates two anonymous referees for their valuable comments.

\*\* Chairman of Park Chung Hee Memorial Foundation and Former Visiting Professor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Chung Hee Foundation, 386 World Cup-ro, Mapogu, Seoul 03906, Korea, Phone: +82-10-5221-9420, e-mail: jwa4746@naver.com